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3-54호 / 10월 23일

중국 ‘11.5 계획’(2006-2010)의 경제·사회 발전목표와 실천과제

1. 개요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1.5 계획(2006~2010)’ 기간중 중국이 직면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요인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경제·사회발전 목표, 내용 및 수단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함.¹⁾
 - 중국은 현재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일방주의, 테러리즘 등 불안정한 세계질서, 글로벌경제시대 하의 지역협력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에 직면해 있음.
 - 대내적으로도 여러가지 난제들에 직면해 있는바, 이들 문제는 ‘11.5계획’ 시기에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음.
 - WTO 협정 준수를 위한 경제·사회발전 및 관련 정책 제정과 실시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확대
 - 1998년부터 실시된 내수확대정책의 조정 필요성
 - 도농(都農)·지역·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경제로의 편입, 농민 소득문제, 농촌 복지문제 등 ‘3농’

1) 본 브리핑은 최근 중국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이 발표한 보고서 “11.5 계획기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사고(關於“十一五”時期經濟社會發展的若干思考)”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문제는 현대화 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

- 단순노동자에서부터 고급인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취업난 가중
- 인구증가 및 경제발전, 사막화, 토질 오염, 수자원 부족·오염 등에 따른 전략적 자원 부족문제의 심화
- 2003년초 발생한 사스를 계기로 대두된 공공관리·안전시스템 개혁, 중앙정부의 조정능력 제고 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

□ DRC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적·단계적 목표 확립,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 개방적·통일적·경쟁적·질서 있는 시장환경 건설,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중앙정부의 권위 강화, 정부 조정능력의 제고, 도·농간의 통일된 발전전략 실시, 인민 복지문제의 개선, 개혁의 공정성 보장 및 개혁에 따른 수익 범위 확대 등임.

2. ‘11.5 계획’ 기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

□ ‘11.5계획’ 기간의 주요 목표는 ① 국가 역량 및 국제경쟁력 제고, 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균형·조정, ③ 고용 창출, ④ 경제성장의 천연자원 의존도 축소, ⑤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 등으로, 이들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협조와 조화가 가장 중요함.

- 이는 경제성장을 유일한 목표로 하는 발전 또는 자원고갈과 생태환경을 경시하는 발전 등과는 구별되는바, 특히 “인간”의 발전을 가장 핵심으로 하며, 인류와 자연간의 조화 및 조화로운 인간사회 건설을 강조함.
- 또한, 경제와 사회의 공동 발전, 경제성장의 질적·양적인 조화, 도-농간 공동 번영, 지역간 공동 발전, 모든 사회계층의 공동 이익,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함.

□ 전반적인 협조 및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DRC는 아래 8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① 지역간 협조: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은 지역간 발전 격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의 축소를 의미하며, 전국적인 통일시장 건설, 지역간 분업의 합리화, 지역간 협력 강화 및 이익분배 메커니즘의 형성 등을 의미함.
- ② 도-농간 협조: 도-농간의 발전격차는 지역간 소득격차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바, 점진적인 도-농 일체화의 제도적 장벽 해소, 물질문명·정치문명·정신문명 건설에 있어서의 도-농간 통일되고 조화로운 계획 수립, 도-농간의 교육·의료·상수도공급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격차 축소 등을 통한 도-농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의미함.
 - 또한, 농촌노동력의 도시경제로의 이전과 도시경제의 농촌현대화 견인 역할을 통해 도·농경제는 물론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③ 이익집단간 협조: 개혁의 심화, 특히 소유제 다원화에 따른 노사갈등과 같은 이익집단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균형있는 이익배분과 공동이익 추구 차원에서 이익집단간의 화해와 협력을 실천해야 함.
- ④ 인간과 자연의 조화: 천연자원의 유한성, 생태환경 보호, 최소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산과 소비활동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해야 함.
- ⑤ 물질문명·정신문명·정치문명간의 조화: 지속적인 물질적 부(富), 풍부한 정신세계, 주민의 정치참여수준 제고와 함께 전반적인 국력 신장, 과학기술 신장, 우수한 문화 계승 및 발전, 청렴하고 공정한 정치 등을 의미하는 물질문명·정신문명·정치문명간의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통일을 도모함.
- ⑥ 수직적·수평적 관계의 협조: 수직적(중앙-지방간), 수평적(부처 및 부문간)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위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

하며, 각 부문별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확립함.

- 이를 통해 중앙정부 정책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지도·조정기능과 통제능력을 강화함.

⑦ 개방과 혁신능력간의 조화: 대외개방에 따른 이익과 해외자원 및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대외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배양하는 등 대외개방과 기술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함.

-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력 보유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외부자원과 시장에 대한 심각한 대외의존은 경제안보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및 인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음.

⑧ 단기계획과 장기계획간의 조화: 중국은 현재의 발전은 물론이고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바, 장·단기의 조화로운 계획이 필요함.

- 이는 현실적인 적절한 수요 증가, 천연자원에 대한 성장의존도 축소, 발전능력 제고 등을 포함함.

3. ‘11.5 계획’ 제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적·체계적·단계적인 목표를 확정해야 함.

-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에 의거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유지, 과학·기술 제고, 경제발전의 천연자원 의존도 감소 및 환경오염 감소, 조화로운 사회시스템 구축,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 실현 등 5개 부문으로 세분할 수 있음.

- 다만,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목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지역별 발전목표는 지방의 현실적 여건, 지방정부 권한 및 책임 범위내에서 계획해야 할 것임.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천연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한편, 기술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대체 성장요소를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에 ‘11.5계획’에서는 저가의 건설용지 취득, 대규모 국채투자 발행 등 기존의 경제성장 요소들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 개혁·개방이후 연평균 성장률 9.5%를 기록해 온 중국은 현재 지나친 자원소모, 생태·환경 파괴, 사회적 갈등의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겪고 있으며, 내수확대정책으로 인한 잠재적인 재정위기에 직면함.

□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효율과 이익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통일되고, 경쟁이 존재하며, 질서 있는 시장환경 건설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봉쇄 타파, 지방보호주의 제거 및 전국적인 통일시장 건설, ▶독점체제 타파와 시장경쟁 촉진, ▶신용제도 구축과 기업 상거래 규범화, ▶법률 집행 강화, 소비자 이익 및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그에 따른 해결이 필요함.

□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이 중요한바, 이를 촉진하기 위해 대체로 다음 8가지 조치가 필요함.

- 중국은 종합적인 국토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지역구획 방식에도 결함이 많은바, 조속한 시기에 종합적인 국토계획을 제정해야 함.

○ 3大 經濟帶, 6大 종합경제대, 9大 경제대, 9大 경제권 등 기존 지역구획방법은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행정구획과 일치하지 않으며, 역사적 지속성을 결여하거나 중국 전역을 포함하지 않는 등 모두 일정한 결함을 지니고 있음.

○ 이에 국제적인 사례와 중국의 현실을 결합하여 중국대륙을 8개 구역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함.

- ①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을 포함한 동북지구
 - ② 北京市, 天津市, 河北省, 山東省을 포함한 북부연해지구
 - ③ 上海市, 江蘇省, 浙江省을 포함한 동부연해지구
 - ④ 福建省, 廣東省, 海南省을 포함한 남부연해지구
 - ⑤ 陝西省, 山西省, 河南省, 內蒙古自治區를 포함한 황하 중류지구
 - ⑥ 湖北省, 湖南省, 江西省, 安徽省을 포함한 장강 중류지구
 - ⑦ 云南省, 貴州省, 四川省, 重慶市, 廣西壯族自治區를 포함한 서남지구
 - ⑧ 甘肅省, 青海省, 寧夏回族自治區, 西藏自治區, 新疆위구르족自治區를 포함한 대서북지구
- 또한, 향후 국토개발 종합계획 제정시 珠江경제대, 長江경제대, 隴海-蘭新경제대와 京津(北京-天津)-呼包銀(呼和浩特-包頭-銀川)경제대 등 지역협력 발전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함.
 - 지속적인 서부대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해야 함.
 - 현재 서부대개발은 주로 대규모 국채발행과 중앙예산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인프라건설에 집중되고 있음.
 - 향후 국채발행이 중단될 경우 서부지역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진일보한 대외개방의 추진, 경제 전반의 장기적인 고속성장 유지,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기초 마련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동부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사회적 부담 가중, 구조조정의 어려움, 시스템 전환의 장애요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노공업기지(老工業基地)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해야 함.
 - 이는 중국의 현대화 촉진과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 다만, 동 사업은 전통산업의 구제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경제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계획해야 함.
 - 광활한 국토와 다민족 국가이며 지역간 경제격차가 심각한 중국으로서는 강력

한 중앙정부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바, 중앙정부의 권위를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전반적인 조정능력을 제고해야 함.

○ 특히 최근 발생한 사스 사례와 같은 비상시기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에 강력한 조정능력을 지닌 중앙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농촌의 발전과 번영이 필수적이나 현재 도-농(都-農)간의 심각한 경제적 격차는 내수확대와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는바, 도-농간의 통일된 발전전략을 실시해야 함.

○ 현재 농촌인구는 전체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도시화수준이 60% 내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도 약 6억 명의 농촌인구가 존재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동 문제는 ▶경지부족 지방의 도시화를 통한 농민이익 보장, ▶공업기술의 농업으로의 환류작용(feedback) 실현, ▶농민의 도시 이전을 제한하는 제도적 요인의 해소, ▶농촌토지제도 개혁에 따른 농업현대화 및 도-농간 공동발전의 긍정적 작용 등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임.

- ① 교육투자 확대, 교육체제 완비를 통한 공평한 의무교육 실현, 직업교육·고등교육 수익집단의 확대, ② 의료·보건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의료·보건제도 완비를 통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 ③ 호적 및 노동제도 완비를 통한 도·농 주민의 평등한 노동권 향유, ④ 양로체제 완비를 통한 노령화문제 대응, ⑤ 인구정책 완비를 통한 성비(性比)불균형 대응 등 인민 복지의 근본적인 개선을 실현해야 할 것임.

- 공정한 개혁을 보장하고 개혁에 따른 수익범위를 확대해야 함.

○ 개혁에 따른 수익의 편차는 개인능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민의 불만 증폭의 주요인이 되는데, '11.5 계획'에서는 공정한 개혁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임.(***)